

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부총리 모두발언(10.16일)

[도입]

-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최근 중동 분쟁 격화,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, 美 대선 임박 등 우리의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
- “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”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의 ‘사전 점검 → 조기경보 → 선제대응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.
- 이에 따라 오늘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핵심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상 취약지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.

[안건 1: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리스크 점검]

- 먼저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300여개의 경제안보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이 큰 50여개 품목에 대해
-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과 비축 현황, 국내 생산 및 대체수입 가능성 등 대비상황을 점검합니다.
- 이를 바탕으로, 관계부처·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불안 발생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위기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[안전 2: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(안)]

□ 이어서 지난 '21.11월, '23.12월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하였던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.

□ 차량용 요소는 현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나, 수입선 다변화* 등을 통해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.

* '24.1~8월 산업용·차량용 요소수입 비중(% 중량기준): (베트남)48 (중국)32 (카타르)7

* '23.12월 이후 제3국 요소 수입 시 물류비 단가차액 50% 보전 중

□ 현행 관계부처 합동 점검·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, 우선 내년에는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 수입을 위한 장기계약시 단가 차액의 50%를 보조*하고,

○ 할당관세**의 적용도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입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'25년 정부 예산안에 신규 반영

** 할당관세: (기본세율) 8% → (할당관세) 0%

○ 더불어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의 대폭 확대, 국내생산 지원 등의 방안들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, 내년 1분기까지 확정·발표하겠습니다.

[안전 3: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]

□ 다음으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을 점검합니다.

□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 결과, 1차로 9개 부처에서 총 84개의 기업을 선정하였고(8.14일),

○ 부처별로 수시로 선도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여 5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.

- 공급망기금은 9.27일 최초로 4개 기업에 대해
1,520억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,
10.4일 1,900억원의 기금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습니다.
- 공급망기금은 대출·보증 이외에도,
1조원 규모의 공급망 분야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중에 있으며,
- 내년에는 10조원 규모로 기금을 확대하여
우리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.

[안건 4: 공공비축 현황과 '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(안)]

- 마지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던 공공비축 현황을
공급망안정화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시각에서
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.
- 비축은 경제안보를 위한 “최후의 보루”라 할 수 있습니다.
- 향후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
주요 품목의 비축 필요성, 비축규모와 비축방식을 결정하는 등
비축정책을 고도화하겠습니다.
-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-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